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
2022/06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이서희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07)

Contents

이슈포커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일관계의 중대한 전환점 될 수도 ····· 2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7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제15차 지역워크숍 개최

국제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8
유엔 안보리, 기니만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 규탄 안보리 결의안 채택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 13
제6기 CLCS 위원 선출

지역별 동향

아시아 ····· 15
중국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공사 지원…비밀 해군기지 건설 의혹 제기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진수
오키노토리시마 대륙붕 두고 중·일 신경전 격화 … 일본 주장 반박하는 중국 논문 잇따라 발표
일본 동중국해 상 중국의 해상구조물 확인 후 강하게 항의

북아메리카 ····· 28
덴마크-캐나다 한스섬을 두고 이어온 '위스키 전쟁', 49년만에 종결
미국 중국-러시아 군사 위협에 5년만에 국가안보전략 수정

유럽 ····· 32
그리스-알바니아 이오니아해 경계획정 분쟁 해결을 위해 속도 내기로 합의
러시아 쿠릴섬 근해에서 일본의 어업활동을 허용한 1998년 협정 이행 중단 발표

태평양도서국 ····· 36
태평양도서지역에 대한 중국의 구상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전략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41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포커스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박 영 길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일관계의 중대한 전환점 될 수도

최근 들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에 대한 전문가들의 언론 기고가 부쩍 늘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관해 여론을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이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1974년 채택하여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의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그런데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발효 후 50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당사국 일방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협정은 발효 후 50년이 되는 2028년 6월 22일부터 종료될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협정 종료를 미리 통고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지금부터 3년 후에는 종료가 가시화되고, 5년 후에는 실제 종료될 수 있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 공동개발구역도 사라지게 된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국제정세와 국제해양법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국제법적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운명은 향후 한일관계, 나아가 동북아 국제해양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채택 배경과 공동탐사 결과

1969년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유엔 극동경제위원회가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같은 해 북해 대륙붕사건에서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지지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한국은 신속히 대응하여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 광구를 설정하였다. 여러 광구 중 제7광구 등 일부는 양국 연안으로부터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일본 측 해역에 위치하였다. 이에 일본이 자국의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항의하자 양국은 교섭에 나서게 되었고, 결국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협정 채택에 이르게 되었다. 이 협정에 대해 한국은 같은 해 12월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일본은 의회의 동의를 1978년에서야 겨우 받게 됨으로써, 1978년 6월 22일 발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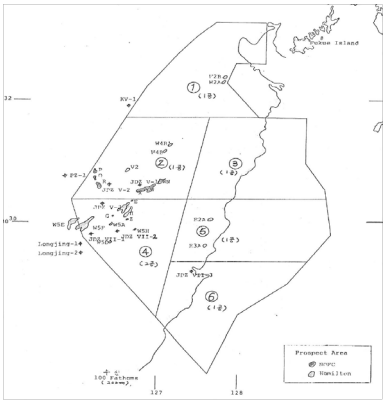
이슈포커스

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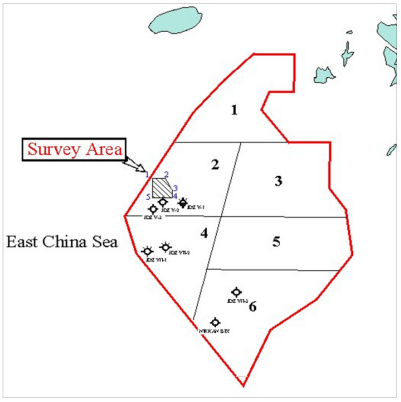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한국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제7광구 전부와 제5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흔히 7광구로 불리는데, 면적은 82,557㎢로 한반도의 약 80%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 약 40년 동안의 공동탐사 실적은 미미하다. 1979년 5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제1차 탐사기간에 양국은 탐사를 위한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공동개발구역 내 3개 소구역에서 총 7개공의 시추를 하였지만 유의미한 가스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1991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의 제2차 탐사기간에는 제1차 탐사기간 동안 획득한 탐사자료를 분석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했을 뿐 실제 탐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인근에서 다수의 유전을 발견하고 개발에 나서자,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여 2002년 8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공동개발구역 제2소구 내 503㎢ 면적에 대해 3차원 탄성파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결과 일부 유망구조와 잠재구조를 발견했지만 경제성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이후 일본이 한국의 공동탐사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공동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 유망구역과 3D 물리탐사 구역



〈1차 탐사자료로 추정한 유망구역〉
자료: 국가기록원 (1987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



〈2002~2004년 3D 물리탐사 구역〉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2.8.2.)

석유가스 자원의 매장량 가능성 충분

1969년 유엔보고서는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부풀게 했다. 그래서 1980년 가수 정난이의 석유를 '검은 진주'라고 하는 "제7광구" 노래도 유행하였었다. 하지만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된 지 40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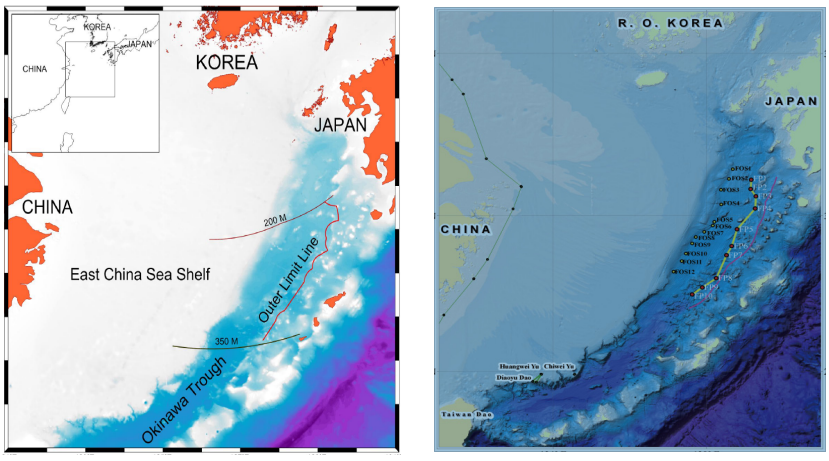
이슈포커스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구역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일본은 2차례의 탐사를 통해 경제성 있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탐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동안 확보한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제1차 탐사기간 동안에 실제 시추한 곳은 9개 소구역 중 3개 소구역 내 총 7개공에 불과하며, 2002년의 3D 물리탐사 면적은 제2소구역 내 50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탐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고려하면 미탐사지역과는 별개로 기존의 탐사지역도 새로이 조사할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국은 이미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바로 인근 해역에서 석유가스 자원을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내에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 자원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의 영향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을 지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판결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최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위한 기준으로 '공평한 해결' 제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대륙붕 인정 등의 규정을 두었다.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를 대륙붕으로 보면서 200해리를 넘어서까지 대륙붕을 확장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다.

그림 2. 한국(좌)과 중국(우)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확장 주장



자료: CLCS 홈페이지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은 2012년 12월 각각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였다.(첨부 지도 참조) 비록 일본의 이의제기로 인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가 보류되었지만,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면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으로 인해 어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미래의 한일 관계 시금석

한일 관계를 냉각기로 몰아넣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현재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역사적 문제와는 달리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문제는 주로 경제적, 법적 및 국제정치관계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사안에 대해 실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교착상태인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되고,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관계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싸고 예상 가능한 사안을 다음 몇 가지로 설정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종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내 학자들 사이에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당연히 곧바로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와 중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병존한다. 전자는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중간선을 그어서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독자적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와 반대로 후자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전자의 견해에 오점이 있다고 본다. 잠정약정 성격의 공동개발협정의 종료로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한중일 3국의 관할권 주장이 중첩하는 이른바 경계미획정수역으로만 남게 된다. 이 때 일방이 중간선 등을 경계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독으로 개발에 나설 경우 주변국들의 잠재적 권리를 침해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곳에서 가스자원을 개발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해양경계가 획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할권 주장이 중첩하는 수역에서는 석유가스 자원개발과 같은 물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활동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단독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련국과 해양경계획정을 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이미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이슈포커스

를 통해 오키나와해구 앞까지 자신의 대륙붕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경계획정 협상에서 일본이 원하는 중간선으로 해양경계가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국제법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을 근거로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을 당사국 동의 없이는 국제법원이 다루지 못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또는 한중일 상호간에 협상을 통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경우 일본이 가상 중간선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해양질서 관점에서의 문제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세력이 양분된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중일 간에는 동중국해의 조어도 영유권과 주변해역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 관점에서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견지할 수가 있다. 한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중국과는 어업협정, 일본과는 어업협정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통해 해양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는 이렇게 갈등과 긴장관계가 팽배한 가운데 어렵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중국해 해양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해 상호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은 예상되지만 그 여파의 폭은 가늠하기 힘들다.

위의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향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에 따라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해양질서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가에 달렸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연구원 김 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15차 지역워크숍 개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지난 6월 2일 "해양법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ITLOS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 간 몰타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국제해사기구 산하 국제해사법연구소(IMO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ion, IMLI)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후원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IMLI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의 개최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재판소의 법리 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알버트 호프만(Albert J. Hoffmann) 소장은 개회사에서 몰타의 유서 깊은 해양사와 현대 해양법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다. 또한, 몰타 대사 아비드 파르도(Arvid Pardo)의 유명한 1967년 유엔총회 연설을 상기하면서, 해양공간의 문제는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가관할권 이원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IMLI와 KMI, 사이프러스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데이빗 아타르드(David Joseph Attard) 재판관은 환영사에서, 해양법협약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함에 있어서 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판소가 해양 분쟁을 결정하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번 지역워크숍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의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이해하고 국제법원이라는 제3자적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역워크숍에 참석한 지중해 국가들은 해양경계획정과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문제에 관한 여러 분쟁을 가지고 있다.

출처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Press Release, 2 June 20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유엔 안보리, 기니만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 규탄 안보리 결의안 채택

2022년 5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기니만 연안국의 국내법에 따라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를 범죄화하고, 국제법에 따라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요구하는 결의안 제263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림 3. 기니만과 기니만 연안국



그림 출처: 중앙일보, 2021년 5월 22일, 서아프리카는 '해적의 바다'…지난해 선원 납치 96%가 이곳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634호 채택의 함의

그림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634호 채택 회의



그림 출처: UN Audiovisual Library 홈페이지. 기니만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제2634호 채택을 위해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9050회 회의 동영상 캡쳐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기니만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제2634호는 상임이사국 5개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아랍에미리트) 10개국 총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은 10여년 전 같은 목적으로 2번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첫 번째 결의안은 2011년 8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018호이다. 이 결의안 역시 상임이사국 5개국과 당시 비상임이사국이었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콜롬비아, 독일, 가봉, 인도, 레바논,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서아프리카 10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두 번째 결의안은 2012년 2월 2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039호이며, 이 결의안 역시 상임이사국 5개국과 당시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아자르바지엔, 콜롬비아, 독일, 과테말라, 인도, 모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토고, 서아프리카 10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올해 채택된 제2634호를 포함하여 기니만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기니만 해적 문제를 위한 결의안 10년 만에 다시 채택

결의안 제2634호와 같이 기니만 해적 문제를 위한 결의안이 약 10년 전에 두 번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결의안 2634호가 채택된 이후, 헤럴드 애들라이 아가이만(Harold Adlai Agyeman) 유엔 상임주재 가나 대표는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와 무장강도 행위와 관련하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039호가 2012년에 채택된지 10년이 지난 2022년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가이만은 현재에도 여전히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과 테러리즘,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기니만 해역이 선박, 선원, 해상 무역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아가이만은 기니만 해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법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과거 기니만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의 결의안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거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에 아가이만이 기니만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의안 제2634호 주요 내용 및 이전 결의안에서 추가된 내용

결의안 제2634호는 같은 문제로 채택된 두 결의안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 제2018호에서 유엔은 기니만 해역에서의 무장강도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니만 연안국과 서구 아프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카 기구들의 해적퇴치활동(공동해상정찰, 해적퇴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규정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니만 연안국의 해상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해상안보의 역량강화를 위한 일부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기여 및 지원을 독려하였다. 두 번째 결의안 제2039호는 첫 번째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이며, 국제사회의 기니만 연안국의 해적퇴치를 위한 해상안보 역량강화 및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제2634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결의안은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한 살인, 납치, 인질을 포함한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 행위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기니만 연안국, 내륙지역, 관련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제항해,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하는 위협을 표명하였다. 이 결의안은 해적 단체가 무기 구입, 신병 확보, 작전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치와 인질극을 벌인다고 하면서, 이는 선원들의 안전과 보안, 상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지원을 받은 연구와 그 조사 결과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둘째, 이 결의안은 기니만 연안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을 확인하면서, 해당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면, 기니만 연안국이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셋째, 이 결의안은 기니만 연안국과 지역기구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안보리 위원회는 기니만 해역의 안전 및 안보를 위해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기구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중앙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ECCAS),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기니만 위원회(Gulf of Guinea Commission, GGC)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UNODC,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서아프리카와 사헬 유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for West Africa and the Sahel, UNOWAS)와 유엔 중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United Nations Regional Office for Central Africa, UNOCA)를 통해 기니만 연안국과 관련 지역기구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넷째, 이 결의안은 기니만 연안국이 해당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 해상 무장강도,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포함하여 기니만 해역의 모든 활동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적용해야 하는 법 제도를 제시하였다. 이 결의안은 이와 같은 법 제도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 해양 안보, 안전 및 개발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아프리카 해상 운송 헌장, 해양 및 해안 보호, 관리 및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과 같은 지역협약 역시 고려하였다. 또한,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국제해양범죄 프로그램과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를 억제하는 UNODC의 권고와 지침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 국가들이 보험 산업 및 IMO와 협력하여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 모든 관련 조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기니만 해역 항해 시 모범 사례 및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섯째, 이 결의안은 기니만 연안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국적 조직범죄, 석유 및 화물 절도, 불법 무기 밀매 및 전용,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거래 및 밀수를 비롯한 해적행위와 해상 무장강도를 범죄화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니만 해역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로 인해 선원이 인질로 잡혀가거나 선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자들과 이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기니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서·중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주변국에 미칠 불안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결의안은 기니만 해역 국가들이 요청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협정 초안을 통해 해당 범죄의 용의자 이송을 위한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존중하면서, 용의자 기소에 협조할 것을 국가들에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적·세계적 해적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한 인터폴과의 정보 공유를 촉구하였고, 범죄자의 기소와 처벌을 위한 법적 체제를 갖추어 국가 운영 방식을 구조화하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기니만 해역 범죄자 체포를 위한 지역인도협정 초안 작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제2634호는 10여년 전에 채택된 두 개의 결의안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첫째, 이 결의안은 국제법에 따른 국가 해양 보안 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기니안 연안국에 촉구하였다. 둘째,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위원회가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운영 및 법적 지원, AU, ECCAS. ECOWAS, GGC와 같은 지역 기구를 조직하도록 유엔 안보리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셋째, 이 결의안은 기니만 연안국, 지역기구 및 타행위자들이 협력을 통해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강도를 방지하고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해적 행위와 무장강도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발생한 수입이 서·중부 아프리카 사헬지대 테러 자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1]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Adopting Resolution 2634 (2022), Security Council Calls on Gulf of Guinea Countries to Criminalize Piracy, Armed Robbery at Sea under Domestic Laws [2] UN Security Council, 31 May 2022, Resolution 2634(2022) [3] Search engine for the UNSCR, Resolution 2034 [4] Search engine for the UNSCR, Resolution 2018 [5] Search engine for the UNSCR, Resolution 2039 [6] 정인섭(2021),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김지혜

제6기 CLCS 위원 선출

2022년 6월 15일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제6기 CLCS 위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3년 6월에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는 총 26명이 입후보했는데, 그중 20명이 선출되었다. 총 21명의 위원 중 20명만 선출된 이유는 동유럽에서 배정된 의석에 비해 후보자가 부족하여 1명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LCS 위원은 임기 5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며,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리학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다. 의석수는 지리적 배분을 고려해 아시아 5명, 아프리카 5명, 동유럽 3명, 중남미 4명, 서유럽 및 기타 국가 3명, 그리고 아프리카 · 아시아 · 서유럽 지역 후보군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은 5개 의석에 대해 9명이 입후보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이 다소 치열했으며, 4차 경합까지 거쳐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오만 출신의 후보자가 최종 선출되었다. 한편 동유럽 국가 그룹은 배정된 의석 3석에 대해 2명만 후보로 등록해 최종 2명이 선출되었다.[1] 그리고 아프리카 · 아시아 · 서유럽 지역 후보군 중에서 선출되는 1석은 아프리카에서 당선되었다.

표 1. 제 6기 CLCS 위원 당선자 명단

	성명	국적	연임 여부	그룹 (후보수/당선수)
1	Carandang, Efren Perez	필리핀	초임	아시아 (9/5)
2	Sivaramakrishnan, Rajan	인도	초임	
3	Tang, Yong	중국	연임	
4	Yamazaki, Toshitsugu	일본	연임	
5	Adnan Rashid Nasser Al-Azri	오만	연임	
6	Apaalse, Lawrence Asangongo	가나	초임	아프리카

1) 동유럽 그룹은 2017년에도 후보자 추천 협의 지연으로 1명에 대한 선출을 연기했으며, 2021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바 있음.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성명	국적	연임 여부	그룹 (후보수/당선수)
7	Loukili, Miloud	모로코	초임	(7/6)
8	Mahanjane, Estevão Stefane	모잠비크	연임	
9	Moreira, Domingos de Carvalho Viana	앙골라	연임	
10	Njuguna, Simon	케냐	연임	
11	Randriamiarantsoa, Tolojanahary	마다가스카르	초임	
12	Brekke, Harald	노르웨이	초임	서유럽 및 기타 (4/3)
13	Dos Santos de Campos, Aldino Manuel	포르투갈	연임	
14	Mosher, David Cole	캐나다	연임	
15	Garcez Faria, Antonio Fernando	브라질	연임	중남미(4/4)
16	Inniss, Helena	트리니다드 토바고	초임	
17	Troisi, Ariel Hernán	아르헨티나	초임	
18	Yáñez Carrizo, Gonzalo Alejandro	칠레	연임	
19	Damrat, Mateusz	폴란드	당선	동유럽(2/2)
20	Glumov, Ivan F.	러시아	연임	

표 출처: SPLOS 자료를 참고해 저자 작성

출처 : [1]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SPLOS 회의, 2022년 6월 15일 [2] List of candidate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for elec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SPLOS/32/9, SPLOS/32/9/Add.1) [3] Arrangement for the allocation of seats 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SPLOS/201)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공사 지원…비밀 해군기지 건설 의혹 제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착공식이 6월 8일 해당 기지에서 개최되었다. 캄보디아 남서부 시아누크빌에 있는 레암 기지는 태국만(Gulf of Thailand)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에서도 인접한 곳이다. 또한 캄보디아와 미국 해군이 매년 합동 훈련을 진행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에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1995년부터 진행해 온 연례 군사훈련, 카라트(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CARAT)에 가입함에 따라 레암 기지에서 양국의 해군 훈련이 진행되어 왔다.

그림 5.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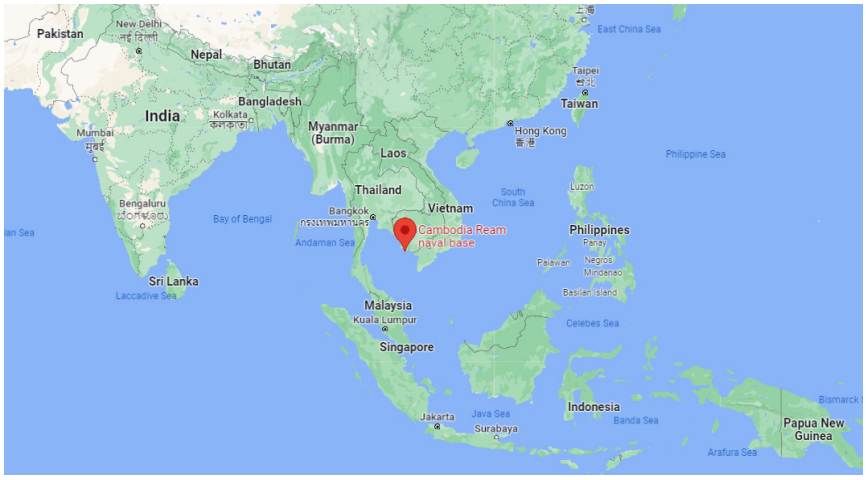


그림 출처: Google

이와 같은 레암 기지의 중요성 때문에 이번 확장 공사의 배경에 관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및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이번 공사의 비용 및 건설 작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현지에 자국 해군기지를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8일 착공식에 참석한 왕원톈(王文天)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가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과 캄보디아 군대 간 철통같은 우정의 상징이자 양국의 상호 호혜적 협력의 기념비이며, 양국의 군사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아시아

중국

차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미국 등 서방을 위시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개입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 해군의 캄보디아 주둔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중국과 캄보디아가 2016년 12월 '골든드래곤(Golden Dragon)'이라는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군사협력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중국의 캄보디아 영토 내 해군기지 건설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9년 8월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조엘 보웰(Joel B. Vowell) 준장은 캄보디아와 중국이 레암 기지에 중국 해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같은 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해군이 레암 기지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거래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림 6. 6월 8일 레암 해군기지 증축 착공식



그림 출처: AP통신

중국이 2019년에 캄보디아 코콩성(Koh Kong province)에서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항 활주로와 심해 항구를 건설하자, 해당 인프라가 중국 군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확산되었다. 실제로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The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MTI)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최근 3년 동안 레암 기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미군이 그곳에 건설했던 해군 전술 본부와 소형 순찰선 수리 창고가 2020년 9월 위성사진에서 사라졌고, 이후 새로운 항구와 해군 시설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데릭 콜렛(Derek Chollet) 미국 국무부 자문관은 "레암 기지 일부가 중국군 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중국이 이 작전을

아시아

중국

은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레암 기지가 중국의 해군 거점이 되는 것이 맞는다면, 이는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해외 해군기지이자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군사 거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갈등 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중국이 지원하는 레암 해군기지 확장·현대화 공사



그림 출처: DW/AP통신

중국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기니에서도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한 경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올해 4월 안보 협정을 맺었으며, 적도기니와는 지난해 12월 자국 군사기지 건설을 목표로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서양 연안에 있는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동부 해안 맞은편에 중국 군함이 상시 주둔하여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동남아 지역 국가들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주시하며 더욱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어 오고 있는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더욱 공세적 행동을 취하거나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호주국립대학교의 국제문제 분석가인 헌터 마스턴(Hunter Marston)은 독일 공영방송 DW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이)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다른 군대를 배제하기 위한 강압적

아시아

중국

인 작전이라면 동남아 해상은 훨씬 더 경쟁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은 중국이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처 : [1] The Washington Post, 2022년 6월 6일, "China secretly building naval facility in Cambodia, Western officials say" [2] DW(Deutsche Welle), 2022년 6월 14일, Is China building a military base in Cambodia? [3] The Wall Street Journal, 2019년 6월 22일, "Deal for Naval Outpost in Cambodia Furthers China's Quest for Military Network" [4] 신화망(新華網), 2022년 6월 28일, "中國援柬埔寨雲壤海軍基地升級改造項目正式開工"

아시아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진수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진수(進水)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6월 17일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집단(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 CSSC) 장난(江南)조선소에서 '푸젠(福建)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진수를 마친 푸젠함은 앞으로 계류 및 시험 항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역까지는 몇 해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3월 건조(建造)를 시작한 푸젠함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3주년 기념일에 맞춰 지난 4월 23일 진수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로 인해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당초 '장쑤(江蘇)함'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진수식 때 정식 명칭이 푸젠함으로 공개됐다. 중국은 항공모함 이름으로 연안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푸젠은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남부 성(省)을 가리킨다. 대만해협 서쪽에 위치한 중요 해군 거점으로, 중국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다. 대만 관련 작전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東部戰區) 육군 사령부도 푸젠성 푸저우시(福州市)에 있다.

그림 8. 중국 3호 항공모함 '푸젠함' 진수식



그림 출처: 인민일보(人民日報)

푸젠함이 완공됨에 따라 중국은 총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공모함은 각각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취역한 랴오닝(遼寧)함과 산둥(山東)함이다. 랴오닝함은 1998년 구소련(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낡은 항공모함을 개조한 것이고, 산둥함은 랴오닝함을 모방

아시아

중국

한 군함에 불과하다. 반면, 푸젠함은 중국이 최초로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기존 두 척에 비해 훨씬 발전된 전자식 캐터펄트(catapult, 사출) 기술이 적용되었다.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항공모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기술도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만재 배수량은 8만여 톤에 이르며, 흘수선은 약 300m, 비행갑판 길이는 320m, 폭은 78m로, 1961년에 취역한 미국의 키티호크(Kitty Hawk)급 항공모함과 비슷한 크기다.

그림 9. 중국 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



그림 출처: Nikkei Asia/교도통신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천원지아(陳文甲) 교수는 "중국은 2027년 이전에 항공모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기 시작해 2035년까지 총 6척을 보유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11척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했다.[2] 이로써 중국은 제1도련선을 넘어 자국 해군력을 서태평양까지 확장하여 미국 항모 전단이 대만해협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는 근해(近海)가 아닌 원해(遠海) 방어를 목표로 삼고,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 인민해방군 해군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년도 중국공산당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대만해협은 2027~2030년에 이르러 고위험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푸젠함 취역으로 인해 중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 대만·미국 해군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Access /Area Denial, A2/AD)'을 추진하는 데 훨씬 유리해질

2) 미국 해군은 현재 핵추진 항공모함 1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해병대가 강습상륙함 9척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중국

수 있다는 것이다.

반(反)접근은 전장에서 적군이 그들의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이며, 지역거부는 아군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적군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위 보고서는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하려고 해도, 중국의 강화된 A2/AD 전략 때문에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 : [1] 인민일보, 2022년 6월 17일, 我國第三艘航空母艦下水命名 [2] 펑촨메이(風傳媒), 2022년 6월 17일, 排水量超過8萬噸、配備電磁彈射系統的「福建艦」: 中國第三艘航空母艦正式命名下水 [3]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2021년 8월 31일, 110年中共軍力報告 [4] MDAA(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8년 8월 24일, China's Anti-Access Area Denial [5] 陳文甲, 2021년 4월 23일, "專論: 突破第一島鏈挑戰海上強權美國？中共遼寧號航母演訓的海軍戰略分析,"

아시아

중국

오키노토리시마 대륙붕 두고 중·일 신경전 격화 … 일본 주장 반박하는 중국 논문 잇따라 발표

서태평양 필리핀해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중국명 충즈냐오자오·沖之鳥礁)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08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한 오키노토리시마 남쪽으로의 대륙붕 확장을 반박하는 논문이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31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중국 관영 CCTV 기자가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중국 측의 논문 발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질문하자 "충즈냐오자오는 섬이 아닌 '암초'로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향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림 10.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 설치한 방파제



그림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아시아
중국

또한, "충즈냐오자오는 만조 시 수면 위로 노출되는 면적이 10㎡가 채 되지 않으나, 일본 측은 현재 이 작은 암초를 근거로 70만㎢가 넘는 관할해역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해 및 국제 해저 지역을 침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31년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 후 1952년 4월부터 미국 신탁통치 하에 들어갔다가 1968년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와 함께 일본에 반환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인 1987년에 일본은 이곳을 '해안보전구역'으로 정하고, 섬 보호를 명분으로 암초 위에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하였다.

또한,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를 포함한 4개 도서 지역을 근거로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해 CLCS에 정보를 제출하였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를 때 배타적 경제수역도 가질 수 없는 '암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CLCS가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CLCS는 2013년 일본이 신청한 나머지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권고 결정을 했으나,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서만 결정을 유보하였다.

그림 11. 일본이 주장하는 E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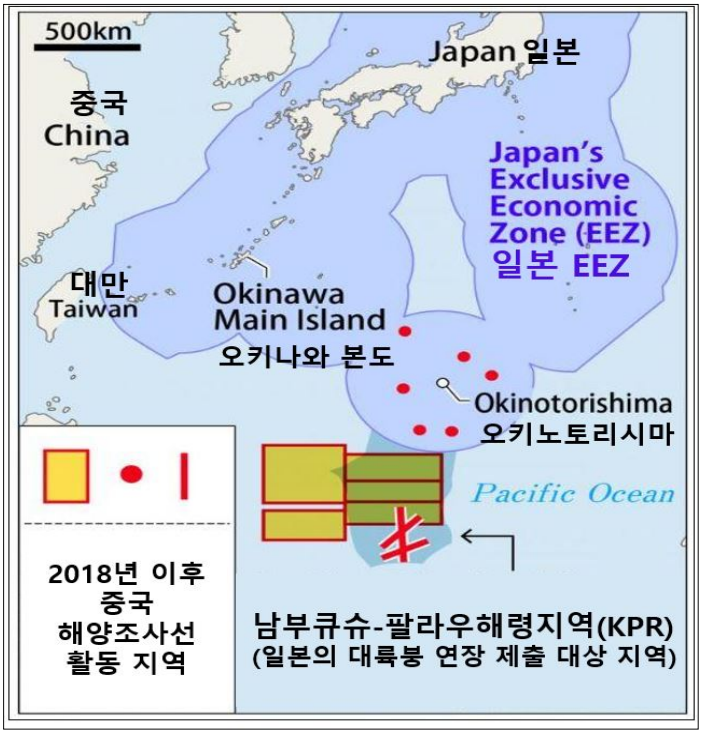


그림 출처: The Sankei Shimbun

아시아

중국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이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석이기 때문에 대륙붕 획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를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CLCS가 인정한 3개 도서 지역을 근거로 총 17만700㎢에 달하는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설정하는 정령을 2014년 9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2016년 4월 26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자국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쪽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나포해, 당시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섬으로 인정되면 중국과 대만은 이 수역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 정부는 '섬'이라는 낱말이 포함된 오키노토리'시마'라는 명칭 자체도 부정하며, 일관된 입장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림 12. 밀물 때의 오키노토리시마



그림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특히, 강한 반발 의사를 드러내 온 중국은 외교적 규탄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주장을 부정하는 지구과학 학술 논문을 대거 발표하고, 해당 해역 주변에서 해양 지질 조사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논문 저자들은 주로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자원부는 CLCS 중국 대표인 탕융(唐勇) 박사가 소속된 중앙 정부 기관으로, 기존 국가해양국과 국토자원부 등이 통합돼 2018년 3월 출범했다.[3)]

3) 탕융은 6월 15일 열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중국 대표로 연임돼 2028년까지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아시아

중국

한편,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앞으로 논문에서 제시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본의 대륙붕 연장 주장에 대한 반론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CLCS의 결정과 관련해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이 최신 장비를 사용해 과거 일본이 수행했던 해양 조사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경계한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이 '과학'의 권위에 기반한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신문은 또한 일본 관리들도 CLCS가 일본의 대륙붕 확장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중국의 데이터가 일본을 불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1] 중국 외교부(中國外交部) 홈페이지, 2022년 5월 31일 [2] 일본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国土交通省関東地方整備局) 홈페이지 [3] 일본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정책 기획 조정실(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on Territory and Sovereignty) 홈페이지 [4] BBC中文網, 2016년 5월 1일, 台灣巡護船赴沖之鳥爭議海域「護漁」 [5] The Sankei Shimbun, 2022년 6월 7일, China Churning Out Academic Reports to Suppress Japan's Maritime Rights.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동중국해 상 중국의 해상구조물 확인 후 강하게 항의

5월 20일, 외무성은 동중국해 상 중일 중간선 서쪽 해역에 해상구조물 1기를 새로 설치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림 13.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서쪽 해역에서 확인된 중국측 구조물 토대



그림 출처: 요미우리 신문, 2022.5.21.

외무성은 양국간 동중국해 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중간선의 서쪽 부분이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중국측에 일방적인 개발 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중일 간 협력을 위해 '2008년 6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교섭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 양위(楊宇) 차석공사에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동중국해 상에서 자원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중일 중간선 인근 해역에 이번 구조물을 포함해 총 17기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아시아

일본

그림 14.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서쪽 해역의 중국측 해상구조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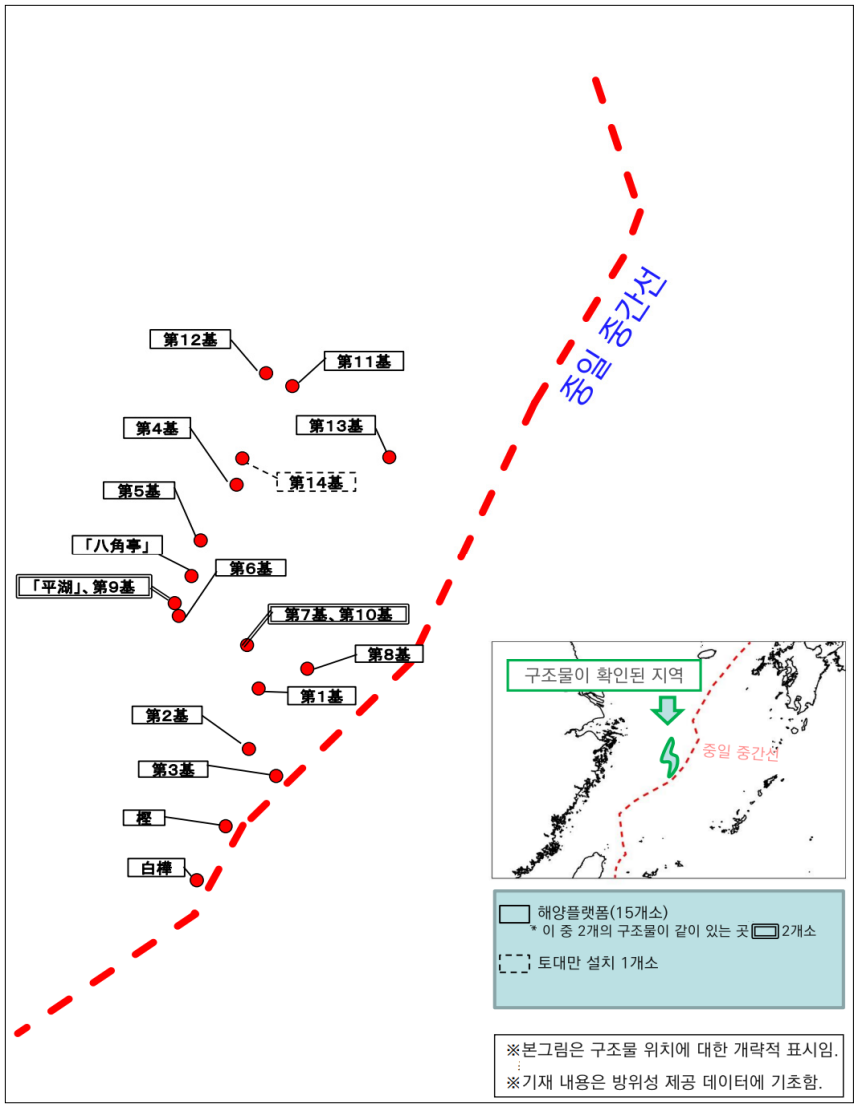


그림 출처: 일본 외무성

출처 :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6월 20일 [2] 요미우리 신문, 2022년 5월 21일, 中国が東シナ海で構造物設置の動き 外務省抗議.

북아메리카
덴마크-캐나다

전문연구원 김소연

덴마크-캐나다, 한스섬을 두고 이어온 '위스키 전쟁', 49년만에 종결

덴마크와 캐나다는 북극해의 작은 섬인 '한스섬'을 두고 49년 동안 이어온 영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6월 14일, 제페 코포드(Jeppe Kofod) 덴마크 외무장관과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외무장관은 한스섬의 분할에 합의하는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였다. 덴마크는 1.3㎢ 크기의 한스섬 중 60% 면적을, 캐나다는 나머지 40% 면적을 차지하기로 하였다.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된 한스섬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령 엘즈미어섬 사이 네어스 해협(Nares Strait)에 있는 섬이다. 이 섬은 캐나다의 엘스미어 섬과 덴마크령 그린란드로부터 각각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스섬은 면적이 매우 좁고 눈으로 덮여있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지만,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활발하게 개척되고 있고, 어업 및 자원탐사·개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다.

1973년 양국은 네어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상 경계선을 설정할 당시, 한스섬을 제외한 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양국 모두 이 분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으나, 1980년 캐나다의 석유회사인 '돔 페트롤리엄(Dome Petroleum)'이 한스섬과 그 주변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서 이 섬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어 1984년에는 캐나다군이 자국의 국기와 캐나다산 위스키를 놓기위해 한스섬에 상륙하였다. 이에 덴마크 역시 한스섬에 덴마크 전통 술인 슈납스를 묻고 '덴마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을 세웠다. 이후 캐나다와 덴마크의 수많은 과학자, 연구원, 탐험가들이 한스섬을 방문하여 상대 국가의 국기는 치우고, 자국의 국기를 꽂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인들은 자국산 위스키 병을, 덴마크인들은 전통주인 슈납스 병을 번갈아 땅에 묻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로써 양국은 한스섬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이른바 '위스키 전쟁'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한스섬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2018년에 들어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TF(Joint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이후 4년만에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다. 양국 외무장관은 분쟁 해결을 기념하며 서로 위스키를 교환하였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는 북쪽 링컨해에

북아메리카

덴마크-캐나다

서 남쪽 래브라도해까지 3,882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 해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중에 탄생한 평화적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소속 국가간의 동맹 의식이 강화된 것에 그 배경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페 코포드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번 분쟁 해결은 국경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력'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림 15. 한스섬 위치



그림 출처: BBC 자료 저자 수정

출처 : [1] BBC, "Whisky Wars: Denmark and Canada strike deal to end 50-year row over Arctic island" [2] Reuters, "Canada and Denmark divide small Arctic island, ending ownership dispute" [3] South China Morning Post, "Canada and Denmark settle decades-old 'whiskey war' over Arctic island".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김소연

미국, 중국-러시아 군사 위협에 5년만에 국가안보전략 수정

미국은 1987년부터 미국의 최상위 외교안보전략을 담은 보고서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미국 전력의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이익, 목표,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협을 억제하고 미국의 안보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방어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패권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를 강조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당초 올해 1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 위협이 증가하자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을 결정하고 발표를 잠정 연기하게 되었다.

당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로 되어있었다. 반면, 국가안보전략의 새로운 초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미국이 중국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며 러시아는 '분명하고 실재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도전과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도전 어느 쪽도 단독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간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아메리카

미국

앞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가 유럽에서 추구하는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서 추구하는 전략에는 일정 수준의 통합과 공생이 존재한다"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결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면 수정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인 위협과 전통적인 지정학적 경쟁 간의 연관성이 보다 명확하게 기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출처 : Bloomberg, "Putin's Invasion of Ukraine Forces Biden to Rewrite US Security Plan"

유럽

그리스-알바니아

전문연구원 김 지 혜

그리스-알바니아 이오니아해 경계획정 분쟁 해결을 위해 속도 내기로 합의

그리스의 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 외무장관과 알바니아 올타 샤카(Olta Xhacka) 외무장관이 지난 5월 23일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가진 회담에서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를 통해 이오니아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스와 알바니아 간 대륙붕 경계획정 분쟁은 2009년에 양국이 합의에 이르면서 해결이 되는 듯했으나, 알바니아 야당에서 해당 협정은 그리스에게 225㎢ 크기에 해당하는 알바니아 영해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0년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는 해당 협정을 무효화 처리하면서 양국 간 관계는 악화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양국은 ICJ에 문제를 회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타협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로 약속했다. 이번 회담에서 그리스 외무장관은 알바니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리스 법도 곧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는 지난 2020년 6월 이탈리아와 이오니아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이집트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그리스는 이를 통해 에게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

그리스-알바니아

그림 출처: 알바니아 외무부

그림 16. 그리스-알바니아 외무장관 회담



출처 : BalkanInsight, 2022년 5월 23일, “Greece, Albania Vow to Speed up Resolution of Maritime Disputes”.

유럽
러시아

전문연구원 김지혜

러시아, 쿠릴섬 근해에서 일본의 어업활동을 허용한 1998년 협정 이행 중단 발표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해양생물자원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Some Matters of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Operation about the Marine Life Resources)상 지불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일본 어민들은 양국간 분쟁지역인 쿠릴섬(또는 북방영토)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양국간 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결정은 최근 일본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가한 경제제재, NATO와의 군사협력 및 공동 훈련 실시 계획 발표 등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1998년 이행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해당 협정에 따라 일본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츠노 리호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없는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개발사업에 일본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의 1998년 협정상 지불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사할린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마치 1998년 어업협정에 대한 조건 사항인 것처럼 연관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수년간 사할린 개발자금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에 따라, 일본 어선들이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대가로 일본은 매년 협의된 어획량 할당 등 기타 조건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다. 1998년 협정 체결 이전, 러시아 당국은 쿠릴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거나 실탄을 발사하였다. 1998년 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유럽

러시아

일본인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결정으로 일본 어선의 안전문제가 다시 우려되고 있다.

그림 17. 쿠릴섬



그림 출처: Bloomberg

출처 : [1] WION, 2022년 6월 9일, "Japan calls out Russia over suspension of agreement that allows Japan to fish in southern Kuril islands". [2] Aljazeera, 2022년 6월 7일, "Russia suspends deal with Japan on fishing near disputed islands".

태평양도서국

전문연구원 민 영 훈

태평양도서지역에 대한 중국의 구상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전략

지난 6월 4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Wang Yi)는 8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순방을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번 왕이 장관의 태평양도서국 방문은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원조를 확대하고, 협력의 분야를 안보까지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림 18.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2022년 5월 30일)



그림 출처: Asia News Network

외교부장 왕이는 5월 26일 솔로몬제도를 시작으로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를 10일간 순차적으로 방문하였고, 특히 5월 30일에는 피지에서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상기 8개국에 더해, 쿡제도, 니우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 참가하였다. 중국은 이번 태평양도서국 방문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무역 및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5개년 다자협정 또는 양자협정 체결을 희망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에 중국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공동개발에 관한 입장 표명서(Position Paper on Mutual Respect and Common Development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이하 입장표명서)"를 발표하고 태평양도서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15개 비전을 발표하였다.[4)]

4)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공동개발에 관한 입장 표명서(Position Paper on Mutual Respect and Common Development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us.china-embassy.gov.cn/eng/zgyw/202205/t20220531_10694923.htm.

태평양도서국

중국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공동 개발 입장표명서

중국은 2022년 5월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직후 당초 중국이 추진하고자 했던 태평양도서국과의 안보 및 무역 협정 체결 계획을 철회하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공동 개발에 관한 입장표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입장표명서는 기존에 협력해 오던 경제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이에 더해 재난 관리, 기후변화, 빈곤문제 해결, 고위급 해양협력 포럼 등 정책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당초 추진했던 중국의 5개년 협정 계획이 전통 서방국들에게 안보에 관한 불안의 씨앗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 및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화상)



그림 출처: Chinadaily

실제 5월 30일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중국의 당초 계획이 태평양도서 지역에 새로운 냉전과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고 하여 중국의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니우에를 포함한 일부 태평양도서국들도 중국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국은 더 나은 합의를 위해 당초 제안했던 5개년 협정 계획을 철회하고 입장표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 입장표명서에서 중국은 안보협력을 15개의 비전 중 하나로 관념적인 형태로만 언급하여, 안보에 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력사항에서도 대부분 분량을 경제와 정책 협력으로 할애하여 태평양도서국들의 지지를

태평양도서국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은 차이나데일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중국은 태평양도서국들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태평양도서국과 중국의 강력한 협력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존재감 확대는 미국과 호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미군의 남중국해 접근 길목을 차단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미연에 차단한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유엔에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유엔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물론 이러한 지지는 중국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약속한 협력 사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전통 지원국인 미국과 호주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때 가능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관계는 교두보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관계는 간접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태평양도서국들과 주변국의 대응

현재 태평양도서국들은 중국의 입장표명서의 제안에 뚜렷한 가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태평양도서국들이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중국과 양자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관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태평양도서국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태평양도서국들이 중국의 제안을 올해 7월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합의된 의사로 결정을 내리는 PIF의 경우, 미국 및 대만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마샬제도공화국, 팔라우, 투발루, 나우루 등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중국의 제안에 원활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의 공격적 제안에 대한 이러한 태평양도서국들의 중립적이면서도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지역의 전통 강대국들은 안보와 관련하여 중국의 움직임에 지속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솔로몬제도와의 안보협정에 이어 5월 28일 사모아와 협력을 위한 또 다른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공안파견, 경찰교육 등에 관한 안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협정 또한 지난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처리되어 명확한 범위를

태평양도서국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주변국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태평양도서국들과 국무위원급의 고위급 회담을 연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또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5월 말 페니웡(Penny Wang) 외교부장관이 피지, 사모아, 통가를 순방하여, 중국 안보협정에 대한 호주의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어서 향후 호주 정부의 외교정책이 "인접국 최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태평양도서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림 20. 왕이 중국 외무부장과 나오미 마타파 사모아 총리의 5월 28일 협정 체결식



그림 출처: Chinadaily

태평양도서국들의 불가분 선택

결국, 태평양도서국들은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자국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경제, 투자, 인프라,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이 중국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위치를 고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지는 5월 30일 중-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5월 27일 왕이 외교부장의 피지 방문직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설립회원으로 참가한다고 발표하여, 양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균형전략을 취하고 있다. 피지 총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는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라우터 통신에서 "현재 피지가 직면한 가장 큰 우려는 태평양 지역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기후변화

태평양도서국

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실업과 생계위기이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태평양도서국들 또한 중국과 서방국들의 지정학적 긴장이 자국민들의 현안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1] Aljazeera(Charu Sudan Kasturi and John Power), 2022년 5월 27일, "China's Pacific tour spurs hopes and fears in tiny island nations" [2] Chinadaily, 2022년 5월 27일, "Genuine benefits of cooperation mean China a reliable partner" [3] Chinadaily(Karl Wilson and Xu Weiwei), 2022년 6월 5일. "Wang Yi's Pacific Islands tour boosts regional development" [4] Chinadaily(Xinhua), 2022년 5월 31일. "China-Pacific islands cooperation sees vitality, bright future" [5] CNN(Simone McCarthy), 2022년 6월 6일, "Why the Sparsely-populated South Pacific islands have become the enxt US-China contetst" [6]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SA, 2022년 5월 30일, "China's Position Paper on Mutual Respect and Common Development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7] NBC News, 2022년 5월 26일, "China's foreign minister starts Pacific tour in the Solomon Islands" [8] The Diplomat(Prashanth Parameswaran), 2022년 6월 9일, "Can the US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Meet the Value Proposition Challenge?" [9] The Guardian(Helen Davidson and agencies), 2022년 5월 28일, "Samoa signs china bilateral agreement during Pacific push by Beijing" [10] US Institute of Peace(Jennifer Staats), 2022년 6월 9일, "Four Takeaways from China's Tour of the Pacific Islands"

3개월 내 행사계획

유엔 해양 컨퍼런스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 포르투갈 리스본

UN Ocean Conference

- **주관** 케냐, 포르투갈
- **주요 내용**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14번(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포괄적 논의
- **안내** https://www.un.org/en/conferences/ocean2022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학술회의: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질서의 변화 |

7월 1일(금) ~ 2일(토) / 웨스틴 조선 부산 오키드룸

- **주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ILA 서울국제법연구원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국제법평론회, 국제해양법학회, The SLOC 한국해로연구회 The SLOC STUDY GROUP-KOREA
- **주요 내용**
  - 1세션: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40년의 성과와 과제 - KMI 주관
  - 2세션: 해양패권 경쟁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 - 한국해로연구회 주관
  - 3세션: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 과제 - 서울국제법연구원 주관
  - 4세션: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
  - 5세션: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갈등과 대응방향 - 국제법평론회 주관
  - 6세션: 해양환경 위기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대응
- **안내** 유튜브 생중계, 현장 참석시 사전등록 필요(사무국: secretariat@connectus.pro)

국제법평론회 하계학술대회 | 7월 14일(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관** 국제법평론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제40주년 기념 해양법 판례 읽기
- **안내** http://www.kril.or.kr/kr/bbs/board.php?bo_table=12scholarship&wr_id=46

국제해저기구 제27차 세션 법률기술위원회 회의 | 7월 4일(월) ~ 15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심해저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 심해저 광업규칙의 제정 검토 등 수행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 7월 18(월) ~ 29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예산, 심해저 개발에 관한 규칙 승인, 심해저 개발 계약자 활동 검토, 법률기술위원회 보고서 논의 등

국제해저기구 총회 | 8월 1일(월) ~ 5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전략계획과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 안건 승인



3개월 내 행사계획

IAME(국제해운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 9월 14(수)~16(금) / 부산 벡스코

- **주요 내용**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해운경제학회의 컨퍼런스와 수백 명의 학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 **안내** 프로그램 및 등록을 위해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ame2022.org/